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남·목영주 / www.ccej.or.kr / Tel.02-765-9731 Fax.02-741-8564
(03085)서울·종로·동송3길26-9 후원 008-01-0567-507(국민)/일시후원 #2540-1989(1통 3천원)

-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 담당
- 발신 :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문의 : 경실련 정책실 윤철한 정책실장 서회원 간사(02-3673-2141)
- 시행 : 2019.07.18.(총 2매)

부도덕 정치인에 대한 징계로 국회 쇄신해야

-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독립성 실효성 강화해야 한다.
- ‘숨방망이 처벌’ 뒷집질 것 아니라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5·18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마치고 최고위원직으로 복귀한다. 5·18망언 국회의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원하는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숨방망이 처벌로 끝난 것이다. 이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소속 국회의원 봐주기 탓도 크지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제구실을 못 한 원인도 크다. 윤리특위는 지난 2월 18일 열렸지만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여야가 서로 상대 국회의원에 대한 우선 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동료감싸기 행태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보완책으로 만들어진,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도 강제성이 없다 보니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또, 윤리특위에 국회의원 징계안을 올리더라도 징계안 처리 기간 규정이 없어, 시간 끌기가 빈번하고 회기 종료 시 자동으로 징계안도 폐기된다. 게다가 제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상설위원회였던 윤리특위가 비상설기구로 격하되면서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징계 심사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지금까지(2019.06.03. 기준) 윤리특위에 43건의 징계안이 상정되었다. 이 중 ‘철회 3건’, ‘심사대상 제외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계류 중이다. 징계 사유는 막말 22건, 괴담과 선동 8건, 이해충돌 및 직권남용 5건, 성추행 등 품위유지 위반 3건, 직무수행 방해 2건, 국가기밀 누설 2건, 정파적 의사 진행 1건 등이다. 20대 국회에서 5·18 망언을 비롯한 세월호 막말, 간첩 망언,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동료의원에 대한 막말, 소수 정당에 대한 폄훼, 좌파독재 막말 등이 계속돼왔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거부감이 증대되고 있는데도, 윤리특위는 여야 정파 싸움에 휘둘리며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제 식구 감싸기, 동료의원 봐주기로 막말과 망언을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의 징계 심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국회 쇄신에 앞장서야 한다. 윤리특위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조사위원회는 윤리특위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윤리조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사에 착수해 징계안을 의결,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또한, 윤리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30일 안에 처리하도록 시한을 정하고, 국회법 제158조를 개정해 의원 징계에 대한 회의를 원칙적 공개해야 한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국회 쇄신에 앞장서는 정당을 지지할 것이다. 국회 쇄신, 부도덕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부도덕 발언과 처사에 대하여 확실하게 징계하고, 정당의 공천 심사 기준에도 적용한다. 국민은 막말 정치와 망언 정치인이 아닌, 국회를 쇄신할 수 있는 인물을 바란다. 끝.

〈20대 국회에서 회부된 징계안 현황〉

징계 사유	건수	비고
막말 및 명예훼손 (간첩 망언,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5.18망언, 동료의원에 대한 막말, 다른 정당 폄훼, 좌파독재 막말)	22	김동철, 이장우, 김진태, 박지원, 한선교, 김민기, 김도읍, 조원진, 곽상도, 유의동, 김석기,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이수혁, 윤영석, 이학재, 홍익표, 나경원, 이해찬, 박광온, 나경원
괴담과 선동 (집회)	8	김한정, 김현권, 박주민, 소병훈, 손혜원, 이재정, 표창원, 조원진
이해충돌 (내부 정부 이용 재산 증식)과 직권남용	5	손혜원, 서영교, 송언석, 이장우, 장제원
품위유지 위반 (작품 전시, 스트립바 출입, 성추행)	3	표창원, 최교일, 김정우
점거 (직무수행 방해, 의사발언 방해)	2	한선교, 홍영표
국가기밀 누설	2	심재철, 강효상
정파적 의사진행	1	정세균